

尹 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 헌재 '탄핵 시계' 빨라진다

헌재, '발송송달' 결론... 탄핵 심판 절차 27일부터 진행키로
국힘, 헌법재판관 청문회 보이콧·임명 팬 헌법소송 '발목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수 차례 거부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시계'는 심판의 날을 향해 갈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보이콧'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 탄핵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이 탄핵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2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을 대리인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어권을 주장하면 헌재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이날 전제헌 헌재 부공보관은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발송송달은 수취인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수취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우편이 도착한 날 서류를 직접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187조('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와 형사소송법 61조 2항(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의 소송법 규정과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보충송달(당사자 부재시 가족 등에게 전달)·유치송달(보충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취당사자 소재지에 두는

것)도 할 수 없으면 공식송달의 요건도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다.

20일 서류는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요구 시한을 송달일부 7일 이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답변서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논리 등을 적는 만큼 재판부가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참고할 수 있다.

결국 변론기일이 예정된 27일 일정은 변동없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으며 선임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헌재는 법을 대리인 선임계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7일 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그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들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조본,尹 성탄절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을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의 2차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해 소환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요구서 발부와 체포영장 청구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우체국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

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로 확인되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23일 밝혔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수사주체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정부 과학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송정역 대형 트리 '빛의 궁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광장에 대형 트리 정원 '빛의 궁전'이 등장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광주송정역세권발전 범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성탄인사를 보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쓰레기소각장 최적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내년 8월 결정
일부 주민 반대 목소리 여전

광주광역시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입지 최적 후보지(1순위)로 광산구 삼거동이 선정됐다. 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 중으로, 소각시설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로 꾸미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제안한 상태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관련기사 2면>

최재완 광주시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최적 후보지를 광산구 삼거동 부지(8만370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결과를 홈페이지와 관보,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환경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빠르면 내년 8월께 최종 입지를 결정·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광산구 삼거동을 비롯한 서구 서창동, 광산구 동산동·지평동 등 4곳의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평가 결과 광산구 삼거동은 8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광산구 동산동 80.6점, 광산구 지평동 80.1점, 서구 서창동 75.9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하는 가연성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최재완 입지선정위원장은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배점표를 확정했고, 전문가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종 입지가 확정되는 날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의 이슈 - 의정갈등 속 의료 공백 ▶6면

팔도 건축기행 - 대구 내당성당 ▶18면

내일 성탄절 신문 쉽니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